

국제표준화 활동 정책 제언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정부가 왜 적극 나서서 계속해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한 번 음미해 본다. 지속 가능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왜 필요한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조속한 정책변화를 기대해 본다.



아주대학교 ITS대학원장
이 승 환
(ISO/TC 204 한국위원회 위원장)

I. 서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도매중간행물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표준전쟁이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들이 제 우리나라도 기술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국민적 자긍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써 해당분야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영원한 선진국 진입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세계무역에서 표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게 된 것은 1993년 출범한 '세계무역기(WTO)' 체제 하에서 1995년 1월 '무역에서의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An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이다.

TBT협정은 세계자유무역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에 의한 비관세무역의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TBT 협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 제정된 국제 표준을, 각 회원국은 해당국의 기초표준으로 삼게 함으로써, 전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협정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



화에 적극 나서게 되었고, 본협정은 지금까지의 표준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에 커다란 인식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앞으로는 국제표준을 벗어나 제품이 나서 서비스는 스스로 무역장벽을 초래하게 되며, 표준에 맞는 제품이야말로 시장진입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당연히 국가별 기술개발 및 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선진국일수록 정책당국과 관련 산업계는 이러한 국제표준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관련 국제표준을 검토하여 이에 맞도록 기술개발하던지, 국제표준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선행하고 이에 기반한 산업화를 추진하며, 나아가 이를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과정에서 표준연구 및 표준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표준관련 기관(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정보통신부/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들도 비교적 빠른 속도에 대처해 왔다고 본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나 ISO/IEC JTC1 등에 새로운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나 서브위원회(SC)가 구성되면, 이를 관련 산업계에 알리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분석하여 해당 위원회의 정회원 등록, 국내 전문가 지정 및 대표단 구성, 국제표준 회의의 참석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이 경우 보다 조직적인 참여가 필요하게 되면, 5개년 계획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된다.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분야의 국제기

술표준 동향 파악 및 이의 국내 보급으로 국내 기술 투자 방향 설정 및 중복 투자 방지, 국제표준 제정 시 국내 여건이나 입장 반영과 함께 국제표준의 조기 국내표준화로 국내 산업 육성, 국내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 기회 포착, 국제적 안목을 갖춘 표준전문기 양성,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 제고 등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되어 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열망하는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II.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지속성 확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무슨 예가냐 하면, 정부가 지원키로 정한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의 단계(대개 5년)가 끝나면, 동일한 이름으로는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지원 정책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나 국내 전문가, 관련 산업계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온 해당 위원회의에서의 국가 위상과 활동기반이 단계 이후 지원이 계속되지 못하게 되면 대폭 위축되거나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주도의 단계 지원 활동으로 국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여 1단계 이후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정부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일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포럼의 활동에 국내 기업들도 적극 참가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공적인 표준을 정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은 한번 시작하면 단계 활동으로 끝날 수 없고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위원회 기구 성립지 오래되지 않은 국제표준화 활동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면 지능형 교통 체계(ITS)의 국제표준을 제정 중인 ISO TC204나 지리정보체계(GIS)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정 중인 ISO TC211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ITS 및 GIS 분야는 최근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그간의 경험 축적되고 새로운 IT 기술이 개발되면서 세계 시장 적용하기 위한 국제표준 제정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고 표준화 대상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대책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정부가 할 일은 국내 산업계가 성장하려면 간주도의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정부 주도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여 관련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이 위축되면 그간 쌓아온 우리의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표준은 한번 제정되었어도 5년마다 폐지 또는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표준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란 아주 간단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1단계 지원 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계속해서 정부

가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넘겨도 좋은지를 판단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러한 평가 작업 없이 1단계 이후 같은 이름으로는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잘못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 정부, 특히 책임안 및 예산당국의 깊은 통찰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정부가 왜 적극 나서서 계속해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음미해본다면, 지속 가능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왜 필요한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본다.

| 기술표준 2007. 3

